



사이버 공간의 국가변환과 세계정치 : 동주 국제정치학의 탈근대적 지평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공분야: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
대표업적: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근간),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2010), 『정보화 시대의 표준경쟁: 원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2007) 외 다수

초 록

이 글은 동주(東洲) 이용희의 근대국가의 변환과 미래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동주가 1960년대 초반 <일반국제정치학(상)>에서 제시한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적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와 1990년대 중반 <미래의 세계정치: 국가연합론 강의>에서 제기한 미래 국가모델에 대한 논의를 현재적 맥락에서 재검토하였다. 이 글은 동주 국제정치학의 텍스트(text) 자체에 대한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동주의 문제제기가 던진 당시의 상황(context)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間)텍스트적(inter-textual)’ 시각에서 동주 국제정치학을 되새겨봄으로써, 후학들이 이어갈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당시 동주가 제기한 논제들이 이후 학계의 연구에 어떻게 투영되어 진화해 왔으며, 그러한 동주의 논의로부터 여전히 추출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성찰하였다. 특히 이 글은 21세기 국가변환의 사례로서 사이버 공간의 국가변환과 세계정치에 주목하였다. 동주가 전근대 동아시아 공간과 대비되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공간으로서 근대국가 공간을 논했다면,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부상에는 근대 국제정치 공간에 비견되는 탈근대 세계정치 공간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변환과 세계정치는, 동주가 말한 ‘근대국가의 자기모순

의 신테제(Synthese)’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글은 이러한 양상을 근대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정치’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들 간의 세계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로 파악하였다.

1.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의 쇠퇴 또는 변환은 20세기 후반 이래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론적 논제들 중의 하나이다. 1970-90년대의 연구가 주로 글로벌화와 정보화, 민주화 등의 추세 속에서 근대국가의 쇠퇴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연구는 좀 더 분석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역할 재조정 과정과 그 결과로서 부상할 탈근대 국가의 구체적인 형태와 거버넌스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가는 예전과 같이 절대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단순히 쇠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부단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변환의 양상은 이미 경제와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치와 외교, 안보 등의 영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19세기 후반 유럽정치에서 유래하여 전파된 근대 국민국가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21세기를 맞이하여 펼쳐지고 있는 탈근대 국가변환의 지평을 읽어내는 것은 앞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이자 더 나아가 국가전략의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론적·실천적 과제에 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글은 동주(東洲) 이용희의 근대국가의 변환과 미래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주가 1960년대 초반 <일반국제정치학(상)>에서 제시한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적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와 1990년대 중반 <미래의 세계정치: 국가연합론 강의>에서 제기한 미래 국가모델에 대한 논의를 현재적 맥락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이용희, 1962/2013; 1994). 이 글은 동주 국제정치학의 텍스트(text) 자체에 대한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동주의 문제제기가 딛고 선 당시의 상황(context)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間)텍스트적(inter-textual)’ 시각에서 동주 국제정치학을 되새겨봄으로써, 후학들이 이어갈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당시 동주가 제기한 논제들이 이후 학계의 연구에 어떻게 투영되어 진화해 왔으며, 그러한 동주의 논의로부터 여전히 추출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성찰해 볼 것이다.

동주 국제정치학이 제시하는 근대국가 변환의 탈근대적 지평에 대한 논의의 단초는 1960년대 초에 제시되었다. <일반국제정치학(상)>의 말미에서 동주는, “이러한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의 신테제(Synthese)는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 근대국가간의 국제정치로서의 면

과 초국가적인 국가군 대 국가군의 양상은 마치 겹쳐서 박혀있는 사진과 같이 세계정치에 2중으로 투영되어 있다...” 고 적고 있다(이용희, 1962/2013, p.303). 1960년대에 예견한, 2중으로 투영된 사진의 내용은 ‘근대국가간의 국제정치’ 라는 옛 사진과 ‘초국가적인 국가군 대 국가군의 양상’ 이라는 새 사진이 겹쳐있는 ‘세계정치의 이중구조화’ 이다(하영선, 2011, p.281). 1990년대 중반에 출판된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동주는 이러한 ‘모델 케이스로서 근대국가의 변환’ 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했는데, 옛 사진에 겹쳐지는 새 사진의 내용을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던 국가연합의 사례에서 찾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테제(Synthese)로서의 2중 사진을 ‘메타-네이션-스테이트(meta-nation-state)’ 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이용희, 1994, p.280).

오늘날 세계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960년대에 문제제기를 하고 1990년대에 제시했던, 동주의 ‘새 사진’ 은 얼마나 적실성이 있을까?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동주가 제시한 ‘2중 사진,’ 즉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의 신테제(Synthese)’ 의 내용을 현재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1960년대에 예견한 ‘새 사진’ 이 2010년대 중 후반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새 사진’ 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며,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흐릿하나마 두 사진의 윤곽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동주가 던진 문제제기가 그 이후 후학들의 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지평을 열어왔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일 것이다. 다시 말해, 반세기 전 동주의 문제제기가 그 동안 학계의 연구에 어떠한 형태로 스며들어 지속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동주의 틀이 오늘날 세계정치의 변환을 분석하는 데 어떠한 유용성을 갖는지, 아니면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동주의 논의를 어떻게 개작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이 글은 ‘새 사진’ 의 사례로서 사이버 공간의 국가변환과 세계정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사이버 공간이란 단순히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이 만들어낸 온라인의 기술공간 또는 현실과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버추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복합 공간’ 으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초국가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지정학 이슈들도 관여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지 않은 현실공간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이미 전쟁과 안보, 산업과 경제, 사회와 문화, 정치와 외교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주가 전근대 동아시아 공간과 대비되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공간으로서 근대국가 공간을 논했다면,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부상은 근대 국제정치 공간에 비견되는 탈근대 세계정치 공간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변환과 세계정치는, 동주가 말한 ‘근대국가의 자기모

순의 신테제(Synthese)' 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의 국가변환과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동주 국제정치학이 주는 유용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물론 1990년대 후반 타계한 동주가 지금의 사이버 공간을 상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의 문제제기를 사이버 공간의 세계정치에까지 연장하여 음미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사이버 안보, 신흥산업 경쟁, 인터넷 거버넌스 등에서 보이는 초국가적 세계정치의 양상은 동주가 지적한 '새 사진'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부국강병 게임이라는 오프라인 국제정치의 '옛 사진' 과 겹쳐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래 세계정치는 이러한 두 사진이 중첩되는 '이중구조화' 의 과정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모델의 신테제(Synthese)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양상을 근대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정치' 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들 간의 세계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 network politics)' 로 파악하고자 한다(김상배, 2014).

사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사이버 공간의 세계정치' 에 대한 관심은 체험사적으로 동주 국제정치학이 던진 선 목적론 및 실천론과는 상이한 고민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1950-60년대의 현실에서 동주가 던진 질문이 "우리 겨레가 왜 이렇게도 취약하냐?" 였다면(하영선, 2011, p.270),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다. 사실 반도체, 정보화, 인터넷, 온라인 게임, 한류, 그리고 사이버 공간 등과 같은 영역은 한국이 그나마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행보는 동주의 시대와는 다른 실천적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다시 말해 약소국이었던 동주의 시대가 서구의 '일반' 이 '보편' 이 아니라 한국은 '특수'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구별하기를 요구했다면, 오늘날 중견국을 논하는 한국의 현실은 한국의 '특수' 를 '특수' 로서 구별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편' 이라는 이름으로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에게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일반국제정치학(상)>과 <미래의 세계정치>에 담겨 있는 동주의 근대국가론과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보는 미래 세계정치론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동주가 제기한 문제의 맥락에서 국내 학계, 특히 '정보세계정치학회' 로 대변되는 일군의 학자 그룹에서 진행해 온 국가변환과 미래 세계정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주로 지난 20여년의 연구를 통해서 정보세계정치연구회가 펴낸 작업 중에서 주로 세 편, 즉 <네트워크 지식국가>, <네트워크 세계정치>, <복합세계정치론>에 주목하여,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의 신테제에 대한 동주의 문제제기가 어떠한 지평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의 신테제로서 사이버 공간의 국가변환과 세계정치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정보세계정치연구회에서 2018년 출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신흥무대의 미중경쟁> 1-2권의 내용이 근간을 이룬다. 끝으로, 맺음말을 대신하여 미래 세계정치의 변환에 대응하는 실천론의 시각에서

보는 중견국 한국의 미래전략과 국가모텔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II. 동주의 국가변환론과 미래 세계정치론

1.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에 대한 지적

〈일반국제정치학(상)〉에서 동주는 “오늘의 국제정치를 다루려면 부득이 그 연원이 되는 유럽정치의 핵심인 근대국가와 그 사이에 빚어진 국제정치 관념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이용희, 1962/2013, p.123). 동주는 강조하길, “근대 후기 말에 이르러서는 유럽정치의 세계적 팽창과 더불어 정치는 대체로 국가정치로 이해되고 또 국가정치의 ‘국가’는 곧 ‘근대국가’라고 인정” 되었다고 한다(이용희, 1962/2013, p.125).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일반국제정치학(상)〉은 근대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되는 근대국가 자체의 성격에서 나온다는 전제를 설정하였으며, 그러한 근대국가를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라는 세 범주로 나누고, 그 세 범주에서 본 근대국가의 전개과정에서 근대 국제정치의 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작업가설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였다.

동주가 말하는 ‘군사국가’는 군사적 목적과 필요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정책이 다른 것에 우선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구조, 국가재정, 국가정책에 이러한 목적과 필요가 반영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국가로서 성립하고 군사국가로서 발전하고 군사국가로서 현대에 이르렀다. 군사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방대한 상비군의 상설에 있으며, 이른바 국가이익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정책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군사국가로서의 근대국가는 ‘영토국가’의 면모를 띠는데, 여기서 영토국가라는 의미는 단순히 영토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뜻의 국가가 아니라, 일정한 광역의 토지를 분할 점령하여 나라가 어깨를 맞대고 서로 접경하여 있는 유럽의 역사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출현한 근대국가를 지칭하는 다른 말이다(이용희, 1962/2013, pp.138-140).

또한 근대국가는 군사국가와 밀접히 관련된 ‘경제국가’로서 발전하였다. 여기서 경제국가라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영위(營爲)가 나라살림에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정책이 명시적이며 또 의식적으로 ‘부(富)’ 추구하고 상공정책에 치중”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용희, 1962/2013, p.167).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는 이재(理財)와 ‘부’ 추구에 골몰하고, 이것을 대외정책의 지침으로 삼는 상업국가·산업국

가의 모습이 현저하였는데 이 점이 오늘날의 세계정치의 일면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이용희, 1962/2013, p.168). 왕조분규 및 종교전쟁 등의 명분이 국제정치의 표면에서 후퇴한 17세기 중엽 이후 유럽 강국들이 벌인 국제 분규는 기본적으로 상업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유럽의 모든 국가정책을 지배하였는데, 이는 흔히 ‘중상주의’라 부르는 면모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 활동의 확대와 군사력 증가는 서로 밀착되어 있었다.

한편, 동주는 근대국가를 군사국가이자 경제국가로 규정하는 동시에 ‘식민지국가’로서 판단하였다. 실령 식민지를 실제로 획득하지 못하였던 시기와 경우에 있어서도 근대국가의 성향은 식민지국가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근대국가의 팽창사는 바로 식민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경우 식민지란 의미는 단순히 국외 이주와 이민지의 영토화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지역과 그 주민이 정치경제적으로 차별적으로 예측되는 상태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 식민정책이란 이러한 지역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식민지국가란 그 정책이 이러한 식민지의 획득을 꾸준히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식민지정책의 결과는 “‘본국의 이익을 위한 영유(possession)’의 관념 그리고 차별적인 정치 경제의 지배관계 설정”이었다고 동주는 지적한다(이용희, 1962/2013, pp.209-211).

동주는 <일반국제정치학(상)>의 마지막 장에서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로 파악된 근대국가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에 대한 논하고 있다(이용희, 1962/2013, 제5장). 먼저, 군사국가로서의 근대국가의 성격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를 고비로 하여 적어도 대의명분으로는 유행을 멈추었다고 평가한다. 1차대전 이후 국제연맹 등이 표방하는 평화사상과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주요 전승국의 현상유지 정책은 여러 모로 탈군사국가의 경향을 시작케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토군 같은 지역군사조직에 편입된 각국군의 성격 또 혹은 국제군의 지휘아래 있는 군대의 예에 있어서와 같이 초국가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것도 그 성질상 근대국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핵무기와 우주무기의 운반수단의 연구개발에 따른 군비의 팽창은 강대국들로 하여금 핵전쟁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케 했는데, 이는 이른바 군사국가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이용희, 1962/2013, pp.251-271).

둘째, 경제국가로서 근대국가의 면모도 자기모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유럽경제의 기반이 세계경제의 장에서 그것도 ‘계급’이라는 틀을 빌어서 해소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의 출현에 주목하였다. 동주의 지적에 의하면, “유럽경제의 고도산업화 그리고 금융자본의 세계적 활동과 보조를 같이 하여 근대국가의 기본전제인 ‘국가’보다도 상위의, 그 자체가 비국가적인 ‘계급’이 궁극 개념으로 경제를 통하여 정치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경제국가로서의 근대국가가 스스로 겪는 모순 중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 ‘계급’ 관념의 출현은 그 유래로 보아 경제국가로서의 근대국가의 자기관철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경제’의 국제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국제 카르텔에 반영된 자본, 특히 미국 해외투자자본의 국제적 성격이며, 이러한 측면은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국내 카르텔의 형성과는 달라서 국가경제를 손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이용희, 1962/2013, pp.297-302).

끝으로, 일국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국가의 식민지국가로서의 모습도 자기모순을 드러내게 됐다고 지적한다. 사실 근대국가의 식민지주의는 발전해가는 근대국가의 국민경제와 군사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실적인 타협의 측면이 매우 강했다. 왜냐하면 근대국가의 내셔널리즘은 “정치상의 명분, 정책상의 원칙이로되 현실로는 국민 아닌 국민을 식민지에 가짐으로서 명분과 현실과의 괴리를 가교”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족주의(자결권), 민주주의(참정권·인권), 사회복지사상 등과 같은 내셔널리즘의 원칙과 제도는 그것이 서구의 근대국가들에 적용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국주의적이며 동시에 보편주의적이어야 된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일국주의적이었던 까닭에 남의 희생 위에 이 사상·제도가 관철되는 사례가 허다했던 반면, 다른 민족에게는 보편주의적인 위장 아래 전파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항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이용희, 1962/2013, pp.276-301).

이상에서 언급한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동주는 “근대유럽의 국제정치가 온 지표에 걸치는 세계정치로 옮겨짐에 따라 근대국가의 형성, 발전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정치는 원심적이며 원자적인 국가적 요인만이 아닌 초국가적 요인을 가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초국가적 요인은 “단순히 ‘국제주의’라고 하여 유럽의 근대사로부터 맥락을 찾을 수 있는 따위도 아니고 또 막연히 ‘국제사회’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동주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 초국가적 요인은 “근대국가의 활동 속에서 태어나는 변증법적인 성질의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성숙없이 현대의 세계정치도 있기 어려울 것이나 또 한편 근대국가 자체의 성격 중에는 필연적으로 초국가적 요인”을 초래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이용희, 1962/2013, p.288).

그렇지만 동주에 의하면, <일반국제정치(상)>을 집필할 당시까지 “이러한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의 신테제(Synthese)는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 덧붙여 주장하길, “현재 사람은 ‘국제사회’라는 말을 빌어, 혹은 국제법에서 혹은 국제정치에서 하나의 세계를 생각하여 보려고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금(尙今) 개념론이 아니면 국제기구에 대한 기대일 따름이지 강력한 통합원리로서 과거의 유교사회, 기독교사회, 회교사회와 같은 구실을 인간의식에 미치기에는 너무나 앞날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를 동주는 근대국가의 잔존에서 찾는다. “비록 근대국가의 모순이 사망에서 터져 나오고

그것을 단위로 한 국제정치의 양상이, 마침내 모순의 심화와 더불어 변모하여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근대국가의 관념은 아직도 강력히 인간의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국제정치의 근대국가적 양상은 근대적 강국정치로서 상금(尙今)도 세계를 휘덮고 있고 ‘계급’을 내세우는 정치체도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그 현실정책은 근대국가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컨대, 1960년대 초반 동주의 눈에 비친 세계는 ‘근대국가간의 국제정치로서의 면’과 ‘초국가적인 국가군 대 국가군의 양상’이 겹쳐있는 2중 사진이었다(이용희, 1962/2013, pp.302-303).

2. 미래 국가모델로서 국가연합

1994년에 출간된 <미래의 세계정치>는 <일반국제정치학(상)>에서 제기했던 근대국가의 변환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세계정치의 행위자, 즉 동주가 말하는 ‘새 사진’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반국제정치학(상)>과 <미래의 세계정치>에 걸쳐서 동주가 논하고 있는 주제는 현실태로서 특정 국가의 변환이 아니라 이념형으로서, 동주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이른바 ‘모델 케이스’의 변환이라는 사실이다. 동주는 설명하길, 단일국가 개념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단일국가체제가 다 깨진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델 케이스’로 유지되어 온 것이 이제 더 이상 모델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일국가 개념이 프랑스에서도 깨지고 가령 독일에서도 깨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이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모델로서 가지는 그 효용성이 사라지게 되어 다른 모델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이용희, 1994, p.25).

이와 관련해서 동주는 부연설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연방 형태에는 연방국가(federal state) 같은 것도 있고, 20세기 국제정치에서도 독립국가연합(CIS) 혹은 유럽공동체 같은 국가연합 형태도 있지만, 그러한 나라의 형태는 단지 아주 소수의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여태까지의 근대 국제정치에서는 단일국가 개념이 ‘모델 케이스’였고 연방 개념이나 국가연합 개념은 ‘모델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이제 점차 그 ‘모델 케이스’의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예전에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연방이나 국가연합 형태의 나라들이 새로운 ‘모델 케이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이용희, 1994, p.44). 이러한 ‘모델 케이스’의 부상과 관련하여, 동주는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정치체로의 세분화 현상과 국가연합으로 확대현상의 두 가지 경향에 주목한다.

먼저, 지역정치체로의 세분화 현상과 관련하여 동주는 “장래의 새로운 나라 개념은, 그때 스테이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작아질 것”라고 한다. 이러한 나

라는 “에스니시티, 네이션, 문화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한 곳에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정도로 조그마한 규모” 일 것이라고 한다. 흥미롭게도 동주는 이 대목에서 루소의 국가 개념에 주목한다.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동주는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루소가 원래 스위스 사람이어서 그런지 루소는 국가연합이론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는 에스닉 그룹 같은 것을 단위로 자기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있는 정도로 크기가 작은 나라, 살기 편하고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관습이 같아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고 적고 있다(이용희, 1994, p.42).

이와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동주가 주목한 것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으로서 유럽연합인데, 동주는 유럽연합의 시도를 국경이 점차 사라지는 새로운 형태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다(이용희, 1994, pp.42-43). 유니언(union)이라고 명명된 유럽연합은 국민국가를 하나의 구성단위로서 포괄하는 큰 형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동주는 “새로운 나라형태 속에 들어가는 조그만 세포 같은 것으로 내셔널, 스테이트, 네이션 스테이크를 위치 짓고” 있다(이용희, 1994, p.43). 유럽연합이 옛날의 국가연합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명분상으로 국가연합이면서도 부분 구성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오히려 중앙에 일부 주권을 이양” 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국가연합이, 과거 근대국가 형성 이후에 국제정치의 주 무대가 되었던 서구에서, 그것도 규모가 아주 크게 전서구를 포함하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마치 서구의 근대국가가 전 세계로 파급되었듯이 역시 전세계로 파급되어 21세기의 새로운 정치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용희, 1994, pp.63-64).

동주가 상정한 새로운 정치체는 “국가간의 유니언 형태, 즉 근대국가가 구성단위가 되고 그 구성단위국 상위에 있는 광역의 유니언” 이 형성되는 모습이다(이용희, 1994, p.64). 사실 이러한 정치체를 무엇이라 부를지는 매우 중요한 개념적인 논제인데, 동주는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럽공동체를 보통 초국가주의(supranationalism)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초국가(supra-nation)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고 ‘메타-네이션-스테이트(meta-nation-state)’ 라는 말이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메타-네이션-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쓰는가 하면, 그 개념이 다원적인 정체성(pluralistic ident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참 재미있는 암시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용어가 앞으로 적합한 용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주권 개념을 가지고 국가에만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유럽에도 정체성이 생기고 또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식으로 다원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희, 1994, p.280).

이러한 개념적 이해의 연속선상에서 동주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모델 케이스’ 로서

의 정치단위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새로운 탈근대국가는 그 개념적 외연과 내포에 있어서 기존의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에 대한 개념적 파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주는 “국민국가의 한쪽에서는 울트라내셔널리즘(ultranationalism)이라고 부를 정도로 초국가적인, 메타-네이션-스테이트적인 요소로 가려고 하는 면” 이 나오는데, 이것이 현재 유럽연합의 한 가지 경향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다른 한 가지 경향은 작은 크기의 지역공동체에서 찾고 있다. 동주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해 중심의 이익사회체제에 견디지를 못해서 고독을 느끼고 오손도손한 다정함을 서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발전된 이익사회로부터 탈피하여 좀 편하고 다정하며 자기 일상 생활적인 그런 느낌을 회복하려는 경향” 이 지역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용희, 1994, pp.295-296).

이러한 동주의 시각은 유럽연합의 실험을 단순히 옛날의 국가제도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그의 인식을 반영한다. 부연컨대, 근대국가의 질적 변환이라는 시각에서 유럽연합의 실험을 보아야 한다는 동주의 인식은 근대 유럽정치사와 세계사의 맥락에서 본 정치단위체의 순환적 진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특히 동주는 유럽연합의 대두를 ‘역사의 역전’ 이라고 부를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주는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전망을 펼치고 있다.

“역사는 참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상 300년 동안 국민국가 중에 가장 완전한 것이 단일 국가라고 생각해 왔고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이 연방이고 제일 떨어지는 것이 국가연합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300년 역사를 회고해 보면 국가연합이었던 나라도 연방을 거쳐 단일국가로 전파되었거나 혹은 단일국가에 가까운 연방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유럽공동체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역사가 거꾸로 역전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아마 향후 100년 단위로 생각하면, 단일 국가에서 연방을 거쳐 국가연합으로 전파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용희, 1994, pp.293-294).

이러한 ‘역사의 역전’ 이 실현되는 데는 “앞으로 아무리 빨라도 30-40년 이후에야 이루어질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주류가 되기까지는 아마도 100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동주의 전망이다(이용희, 1994, p.68). 지난 100여 년 동안 서구에 기원을 두는 근대 국제정치의 모델 케이스로서 근대국가 완성의 과제를 아직 이루지 못한 한반도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유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입장에서 유럽의 새로운 실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국가연합 형태의 ‘모델 케이스’ 가 마치 19세기 후반에 그러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주도, 만일 유럽에서 국가연합의 새로운 형태가 탄생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지역에 전파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그대로 전파가 되

지 않고 ‘일그러진 형태’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Ⅲ. 국가변환론과 미래 세계정치론의 진화

1.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미래 세계정치의 행위자

미래 세계정치 연구는 2000년부터 시작한 공부모임인 정보세계정치연구회의 주요 테마였다. 특히 동주가 제기한 논제의 연속선상에서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에서 비롯되는 국가변환과 그 결과로 출현할 미래 국가의 역사적 위치와 유형적 양태를 탐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탐구는 2006년에 출판된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으로 결실을 보았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정보혁명으로 대변되는 물질·지적 변화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경험적·이론적으로 천착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모델을 개념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의 국가는 단순히 쇠퇴하기보다는 부단한 역할조정과 형태변환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이 크지만, 동주가 예견한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지평에서 이러한 탈근대 국가의 부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네트워크 국가란 대내적으로는 위계적 관료국가, 대외적으로는 영토적 국민국가의 모습을 하는 기존의 국가모델이 글로벌화와 정보화 및 네트워크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자기변화와 조정을 해나가는 국가이다(Carnoy and Castells, 2001; Ansell and Weber, 1999; Ansell, 2000; 하영선·김상배 편, 2006; 김상배, 2014). 대내적으로는 민간 및 사회 영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대외적으로는 네이션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국가변환을 개념화하려는 시도이다.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은, 한편으로 국가는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적절하게 국내의 하위 단위체에게 분산·이전시킴으로써 그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국가 차원에 주어지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국적 차원의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권력의 기본 자원과 행사방식의 변환에 초점을 맞춘 ‘지식국가(knowledge state)’에 대한 논의와 짝을 이루는데, ‘네트워크 지식국가’라는 이름은 이러한 맥락에서 붙여졌다.

네트워크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몇 가지 층위에서 새로운 국가모델로서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모습은 동주가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논한 유럽지역에

서의 국가변환의 사례보다는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은, 동주가 논한 바와 같이 영토국가의 단위를 넘어서 형성되는 지역통합체의 부상을 지칭하는 이외에도, 글로벌 사안을 놓고 공조하는 비상설적인 정부간협의체(예를 들어, G20)의 부상이나,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양식 등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대내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네트워크 국가는, 동주가 논한 국가 단위 하위에서의 에스닉(ethnic) 집단들의 활성화 현상 이외에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정부-기업 관계의 재조정,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지배 엘리트 연합과 관료제의 변환, 정치·행정학적 시각에서 본 중앙-지방 관계의 재정비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근대국가의 변환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군사국가의 변환을 미국의 군사변환과 변환외교의 전개, 그리고 글로벌 테러 네트워크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였으며, 경제국가의 변환을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와 세계 금융 중심도시 네트워크의 형성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작동이라는 초국적 현상 속에서 이해하였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과학기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식국가의 변환도 검토하였는데, 특히 세계정치 변환의 동력이 되는 물질·지적 조건, 즉 정보혁명 변수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진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은 동주가 제기한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의 신테제’를 개념적·경험적으로 밝히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19세기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전근대 천하예의지방(天下禮儀之邦)이 근대 국민부강국가로 변환하는 과정을 21세기의 사례와 대비해서 보는 역사적 시각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작업은 그 성과만큼이나 향후의 연구 과제를 다수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은유’의 차원에서 네트워크 국가의 개념을 원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분석’의 차원에서 네트워크 국가의 개념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네트워크의 개념을 은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근대국가의 ‘위계조직’ 모델로부터 탈근대국가의 ‘네트워크’ 모델로의 변환을 쉽게 묘사하기는 했으나, 사회과학 전반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종의 트렌드로서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을 보는 일반론을 넘어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창발(emergence)하고 있는 ‘구조’와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엄밀한 개념화나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는 이론적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지적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네트워크 국가가 발휘하는 중심성(centrality)과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의 역할 및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Jessop, 2003; Grewal, 2008).

한편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시도는 경험연구의 차원에서도 과제를 남겼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동주가 논한 바와 같이, 유럽정치에 기원을 두는 단일 국민국가가 근대 국

제정치의 ‘모델 케이스’ 였던 것처럼, 현대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네트워크 국가의 형태가 탈근대 세계정치의 ‘모델 케이스’ 가 될 것이냐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필자들은, 동주가 다른 유럽의 정치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 특히 북미 공간과 동아시아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지역에서 발견되는 국가변환의 사례를 비교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 국가의 출현은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그 진행속도와 발현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국가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방식을 모색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2.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미래 세계정치의 구조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작업과 비교할 때,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론의 틀을 가지고 국가변환과 미래 세계정치를 보려는 시도였다(하영선·김상배 편, 2010). 정보세계정치연구회 10주년을 기념하여 펴낸,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는 동주의 문제제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성찰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였다. 개화기의 양절론(兩截論), 식민지의 국제협조론 비판, 근대국가 건설기의 전진민족주의론, 오늘날의 복합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으로 이르는 경로를 밝혔다. 특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축적되어 온 복잡계 및 네트워크 이론의 개념들을 원용하여 이른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필자들이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네트워크의 관념에서, 단순한 은유가 아닌, 분석이론의 유용성을 찾고자 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행위자와 구조 및 과정의 차원에서 파악되는 복합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보는 시각도 네트워크 조직 이론(network organization theory), 소셜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원용하였다.¹⁾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는 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의도한 바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기본전제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었다. 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전통이 상정하고 있는 이론적 전제들을 네트워크 시각에서 ‘번역’ 하는 작업을 펼쳤다. 예를 들어, 권력중심 가정, 국가중심 가정, 무정부질서 가정에 도전하여 네트워크 권력,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질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비의 작업을 펼친 이유는, 기성 구미 학계의 이론적 논의와 정보세계정치연구회의 이론

1)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실에 적용한 사례로는 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2009), Kahler, ed.(2009), Maoz(2010), Nexon(2009), Goddard(2009) 등을 참조하라. 주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한 미국 학계의 시각과는 달리 세 가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복합적으로 원용하여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모색한 사례로는 김상배(2014)를 보라.

적 작업이 서로 소통하는 접점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개발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통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안고 있는 ‘특수’의 현실을 ‘보편’의 이론적 언어로 담아내고자 했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시도한, 동아시아 세력망의 작동 메커니즘, 동아시아 네트워크 국가의 거버넌스,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아키텍처, 그리고 네트워크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통일론 등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했다.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이론 성과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미래 세계정치의 전략과 행위자 및 구조에 대한 경험적 논의를 펼쳤다는 데 있다. 우선, 네트워크의 시각을 원용하여 한반도 주변4국,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주목했는데, 글로벌 및 동아시아 네트워크 동맹전략과 정부간협의체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네트워크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전개된 일본의 네트워크 외교전략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세계정치>은 중국의 국가전략을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에 도전하는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권력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 본 금융 네트워크의 사례 이외에도 동아시아 차원에서 관찰되는 환경 네트워크와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환경과 인권 분야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중국의 국가권력이 담지하고 있는 근대 국제정치적 측면과 신흥무대에서 창발하는 초국적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변하는 탈근대 세계정치의 동학이 서로 경합하는 양상을 그려내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원권력의 근대 국제정치’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권력의 탈근대 세계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다.

끝으로,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글로벌 및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을 펼쳤다. 주로 ‘행위자’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이해했던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작업에 비해,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과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발견된다. 은유 차원에서 네트워크 행위자의 등장을 거론한 이전 작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세계정치>는 구조의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작동방식을 분석했다. 특히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는 ‘구조’ 개념(Waltz, 1979)을 넘어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하는 ‘관계적 구도’로서의 ‘구조’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실제로 규명하기 위해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념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무기이전 네트워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등에 대한 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가장 큰 의미는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을 단순히 외래이론의 수입이 아니라 국내 학계에서 창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도했다는 데 있다. 사실 이 부분은 동아시아의 현실에 기반을 둔 이론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동주 국제정치학의 문제의식과 통하는 면이 있다. 1960년대 초반 제기된 동주의 이론적 문제의식은 1990년대의 ‘복합’의 시각을 거쳐서 2000년대의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론적·경험적으로 숙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유럽 학계에 기원을 두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에 대한 이해가 다소 피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분석이론의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소셜 네트워크 이론으로 기우는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부제로 내건 ‘은유에서 분석으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분석이론으로서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킨 것은 성과였지만, 이와 더불어 ‘해석’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보는 시각의 적극적인 통합이 부족했다.

3. 복합세계정치론: 미래 세계정치의 과정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지식국가〉와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각각 행위자와 구조 차원에서 국가변환과 미래 세계정치를 분석한 연구였다면,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는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21세기 세계정치의 작동방식을 살펴본 시도였다(하영선·김상배 편, 2012). 탈냉전 이후 복합과 탈근대의 문제의식이 출현한 역사적 맥락 속에 복합세계정치론의 위상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합세계정치론의 이론적 구성요소들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개발된 이론틀을 탈근대 국가변환과 미래 세계정치의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복합세계정치론〉의 가장 큰 의미는 1990년대 초반 탈냉전의 초창기에 잉태된 ‘복합’의 개념과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이론의 논의를 접목시켰다는 데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 단순히 행위자 차원에서 구사되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복합’의 개념을 이해하던 종전의 시각을 넘어서는 계기를 네트워크 이론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개념을 원용하여 행위자 차원에서 추구하는 ‘복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구조’의 숙성과 그 독특한 구성원리를 살펴보는 작업을 펼쳤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위자와 구조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하는 세계정치의 동태적 과정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복합’은 ‘집합(集合, collection)’과 ‘혼종(混種, hybrid),’ 그리고 ‘공진(共進, co-evolution)’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화되는데, 21세기 세계정치의 ‘전략’과 ‘원리’ 및 ‘질서’를 분석하는 작업에 적용하였다.

첫째, ‘집합’으로서 복합의 시각에서 21세기 국가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외

교전력을 분석하는 경험적 작업을 벌였다. 여기서 복합이란, 이슈영역의 측면에서 볼 때 정치군사 일변도의 단순전략이 아니라 정치경제, 더 나아가 여타 분야까지도 포함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전략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하드 파워’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매력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소프트 파워’의 전략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어진 자원변수들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스마트 파워’의 전략과도 맥이 닿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국과 한국의 복합외교 전략 일반에 대한 논의와 한미 FTA에 임하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전략 등을 사례로 다루었다.

둘째, ‘혼종’으로서 복합의 시각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독특한 구성원리를 보여주는 새로운 행위자들의 부상을 검토하였다. 주로 복합의 구성원리가 구현된 사례들을 안보 분야에서 살펴보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복합의 시각에서 본 국가변환과 미래 세계정치의 화두를 장식했던 ‘복합안보’의 개념을 전통안보의 개념과 비교·분석하는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또한 당시 새로이 관심을 끌었던 사이버 안보의 이론적·경험적 쟁점들에 담긴 복합세계정치의 구성원리를 탐구하였다. 한편 글로벌 정치경제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세계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로의 변환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연구는 근대 국제정치의 주 무대였던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구성원리의 내용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공진’으로서 복합의 시각에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원용되는 ‘공진’으로서 복합의 개념은 일종의 ‘메타개념’으로서, 상이한 요소들이 섞이는 ‘집합’이나 새로운 원리가 부상하는 ‘혼종’과는 달리, 한 층위 높은 수준에서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말해, 공진이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관찰되는 두 가지 경향들, 즉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 위로부터의 네트워크화와 아래로부터의 네트워크화, 그리고 근대와 탈근대를 모두 포괄하며 진화하는 변환의 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들로서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복합네트워크와 국가행태의 변화, 복합네트워크화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맥락에서 본 생산과 무역의 네트워크,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그리고 전형적인 근대와 탈근대의 복합안보 이슈인 원자력 문제의 구조와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한편, <복합세계정치론>은 한국의 미래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가 추구할 규범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는 탈근대 국가가 추구할 외교전략의 규범적 지평을 여는 것이었는데, 그 지평 위에서 중견국 한국이 추구할 외교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근대 국제정치의 구조 하에서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노골적으로 패권만을 추구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권력의 정당성을 의식한 규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강대국 국제정치의 속성상 국가중심성과 권력우선성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오히려 중견국이 나서서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추구 경쟁의 맹점을 지적하고, 비(非)

강대국의 시각에서 본 보편적 규범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합세계정치론>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모색할 규범전략의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려는 시도를 펼쳤다(손열·김상배·이승주 편, 2016).

이러한 성과에도 <복합세계정치론>은 풀지 못한 몇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전략과 원리 및 질서의 차원에서 모색할 ‘복합성’에 대한 인식론적·실천론적 논의를 넘어서, 미래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모델에 담겨야 할 ‘복합성’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이 필요했다. 또한 전략과 행위자 및 구조의 복합성을 탐구하는 ‘복합이론화’의 차원을 넘어서 ‘메타이론’의 측면에서 이들 다층적 복합을 엮어내는 이론화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전통과 근대, 탈근대의 복합이라는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복합 구성원리와 작동방식을 이론화하는 문제로 연결된다(전재성, 2011). 이러한 메타이론화 작업은 과거와 현재를 품는 미래 연구의 과제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복합 네트워크’의 이론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IV. 사이버 공간의 국가변환과 세계정치

현재 정보세계정치연구회의 연구는 복합과 네트워크의 이론적·개념적 탐구의 경계를 넘어서 미래 세계정치의 경험적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한국국제정치학회 총괄패널 ‘신흥권력의 부상과 한반도’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17년에는 신흥권력의 부상이라는 시각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과 미중 패권경쟁을 살펴보았다. 좁은 의미에서 본 세계정치 변환의 사례로서 ‘사이버 공간의 미중경쟁’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 인터넷 플랫폼 경쟁, 핀테크, 전자상거래, 사이버 안보, 군사기술, 디지털 공공외교, 인권규범, 전략경제대화 등의 주제를 탐구하였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본 세계정치 변환의 사례로서 ‘신흥무대의미중 규범경쟁’을 분석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정치군사 질서, 무역·금융·자본의 정치경제질서, 유엔외교, 해양패권경쟁, 정치경제모델 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조만간 <신흥무대의 미중경쟁>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상반기에 출판될 예정이다.

1. 사이버 공간의 부상과 근대국가의 변환

신흥권력의 부상이라는 시각에서 본 미중경쟁 연구의 주제 중에서 이 글이 특별히 강

조해서 조명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 공간의 국가변환과 미래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이다. 동주가 전근대 동아시아 공간과 대비되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공간으로서 근대국가의 공간을 논했다면, 사이버 공간은 탈근대 세계정치의 지평을 잘 보여주는 새로운 공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사이버 공간은 단순히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온라인의 기술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사이버 공간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복합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초국가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지정학 이슈들도 관여하는 세계정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간 갈등과 연계된 사이버 테러와 공격,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지식경영, 글로벌 시민사회의 초국적 정체성과 연대,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질서, 온라인 금융의 핀테크, 개인정보의 보호와 빅데이터 주권, 디지털 외교와 매력 네트워크 등은 사이버 공간의 세계정치를 보여주는 현상들이다(김상배, 2010).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21세기 세계정치를 가늠케 하는 선도부문(leading sector)인 동시에 탈근대 세계정치의 지평을 엿보게 하는 선행지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신흥권력의 공간, 즉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전면으로 나서는 공간이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의 활동에 적합한 행위자는 국가 행위자보다는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다. 이들 미시권력(micropower)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거대권력(macropower)에 대항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이른바 ‘비대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없던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현상인데, 예를 들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테러 네트워크, ‘재스민 혁명’과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민주화 시위대, 네티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이밖에도 이른바 ‘집합지성’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활동 등은 예전에는 미미했던 소수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득세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미시권력에만 우호적인 네트워크 공간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거대권력이 그 지배의 메커니즘을 좀 더 교묘하게 재생산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성 권력으로서 ‘공식권력(즉 국가권력)’은 분산되지만 민간 영역의 ‘비공식 권력(또는 사적 권력)’은 오히려 비대화되고 있다. 사실 네티즌들의 미시권력이 발휘되는 사이버 공간은 이미 PC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와 IBM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대의 이른바 GAFA, 즉 구글(G), 아마존(A), 페이스북(F), 애플(A) 등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설계해 놓은 판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세상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에는 GAFA와 같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 이외에도 BATX로 대변되는 바이두(B), 알리바바(A), 텐센트(T), 샤오미(X) 등이 부상하는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거대 사적권력은 서로 경합 내지는 연대하면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 및 정교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각기 해당 분야에서 근대국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국가 행위자들의 부상에 직면하여 근대국가의 역할과 권한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국가의 정책능력, 법정정치 권위,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영토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활동을 통제하는 정부(government)의 정책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화와 정보화 및 네트워크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정부의 직접적 통제 하에 놓이지 않은 국내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 약화나 기술경제적 교환의 초국경화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주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가능해진 다양한 현상들, 즉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대, 국제기구와 정부간협의체의 증대된 외교적 역할, 급증하는 세계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등은 국가의 정책주권을 침식하는 주된 원인들이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해커들의 활동이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국가(statehood)의 법정정치 권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대 국민국가가 누리왔던 법정정치 권위는 침식되고 있다. 누가 정당한 행위자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그 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내적으로 지고하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국가 본연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차원에서 글로벌 인권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관념은 국가의 국내법적 권위를 인정하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이나 탄소배출권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국제규범의 형성도 유사한 사례이다. 또한 국내외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테러리즘, 범죄 행위, 시민분쟁 등은 국가가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행위자라는 전제를 의문시한다. 최근 국경을 넘어 그 활동범위를 급속히 확산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가의 법정정치 권위와 계속 충돌하고 있다.

끝으로, 네이션(nation)의 차원에서 공유된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단위체에 대한 국가관념은 변환을 겪고 있다. 영토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정체성과 충성심이 귀속되는 근거로서 국민정체성의 관념과 이에 기반을 둔 근대적인 의미의 국제질서의 이미지는 다소 퇴색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초국적 정체성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탈냉전 이후 등장한 종족적, 인종적, 종교적, 급진적 정체성의 발현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의 부상은 이른바 탈(脫)노드 정체성 또는 네트워크 정체성의 형성을 추동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동주가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으로서 지적했던 개별 정체성의 발현이라는 문제제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의미뿐만 아니라 긴밀한 공감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가주권의 반격과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

그렇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이 완전히 쇠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무리 초국적 비국가 행위자들의 도전이 거세어지더라도 근대국가를 원형으로 하여 발생하는 국제정치의 면모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서 원용한 국가변환의 세 가지 범주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수행의 차원에서 본 통제 능력이라는 점에서도 국가는, 예전처럼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여전히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행위자이다. 특히 군사안보 영역에서 국가는 여전히 가장 힘이 센 행위자이다. 해커들의 분야로 인식되었던 사이버 테러 분야에도 최근 국가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초국적 맥락에서 발생한 무역과 금융 문제를 해결할 해법도 G7/8이나 G20 등과 같은 정부간협약체가 나서서 모색하고 있다. 사회문화 활동의 초국적 흐름도 국가가 궁극적으로 방향을 틀어 놓을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국가는, 초창기에는 ‘다중이해당사주의(multistakeholderism)’ 라는 민간 주도 담론에 밀려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둘째, 법정정치 권위라는 차원에서도 여전히 국가가 행사하는 권위는 살아있다.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권위가 빛을 발한다. 권력이 분산된 자리에 생기는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목으로 국가 행위자들이 귀환하고 있다. 어떠한 민간 행위자도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공익(公益)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중심성(centrality)을 제공하는 일종의 중개자(broker)이자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의미한다. 초국적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빅데이터 주권의 관철 문제도 최근에 관건이다. 미국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과 중국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2010년 구글의 중국 시장 철수 사건이나 2015년 유럽 법정의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화 판결 등이 이러한 양상을 보여준다.

끝으로 공유된 관념이라는 차원에서도 네이션 단위의 집합정체성, 즉 국민정체성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력과 법정정치 권위로서의 주권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사실 정체성의 보유는 순전히 개인적 선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참여하거나 또는 심리적·물질적 보상을 받고서 수용한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부과되어 충성심을 요구하는 정체성도 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정체성들이 발흥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통하여 중심을 잡는 것은 여전히 국민정체성이다. 특히 평상시에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의 모습을 빌어서 활동하다가도 국가 단위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민정체성은 전면에 나선다. 특히 익명성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러한 국민정체성의 응집성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최근에는 한중일 사이에서 벌어지

는 민족주의적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 전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의 국가쇠퇴 또는 국가변환에 대한 논의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하나의 개념틀 안에서 포괄해서 보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동주가 <일반국제정치학(상)>의 말미에서 제기한 ‘2중 사진’의 초점을 어떻게 하나로 맞추어 볼 것이냐 라는 과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향후 미래 국가론 연구의 관건은, 기존의 근대국가론과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탈근대국가론의 요소들을 하나의 개념 안에 엮어서 보는 이론의 개발과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의 수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앞서 소개한 네트워크 국가론 또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이 주는 시사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국가론은 ‘네이션’의 안과 밖에서 ‘국가’가 기능과 형태를 변환시킴으로써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현상을 분석하려는 작업이며,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능력의 공유와 권위의 중첩, 그리고 정체성의 복합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 세계정치론의 시각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 이들 네트워크 국가들이 벌이는 권력게임의 성격은 기존의 근대 국제정치 권력게임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의 권력게임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의 자원권력을 놓고 벌이는 게임이 아니라, 기술·정보·지식·문화 등과 같은 비(非) 물질적 자원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 즉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해서 작동하는 새로운 권력, 즉 네트워크 권력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이나 경영학과는 달리 국제정치학에서 주목하는 ‘다차원 표준경쟁’의 논의와 통하는데, 예를 들어, 정보통신산업이나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표준경쟁, 이와 병행해서 발생하는 정책과 제도 차원의 ‘모델 케이스’ 경쟁,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한 사이버 공간의 규범경쟁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김상배, 2007; 근간).

3. 사이버 공간의 미중 신흥권력 경쟁 사례

이러한 다차원 표준경쟁의 시각에서 보면 선도부문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신흥권력 경쟁은 탈근대 국가변환과 미래 세계정치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선도부문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은 국제정치 구조의 변동을 반영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정치이론의 오래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해당 시기 선도부문에서 나타났던 경쟁력의 향배는 세계패권의 부침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ilpin, 1987; Thompson, 1990; Modelski and Thompson, 1996; Rennstich, 2008; Akaev and Pantin, 2014). 가장 비근한 사례로는 20세기 전반 전기공

학이나 내구소비재 산업, 또는 자동차 산업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을 들 수 있다. 좀 더 가까이는 20세기 후반 가전산업과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21세기 선도부문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을 이해할 수 있다(김상배, 2007).

그런데 앞서 살펴본 국가변환과 미래 세계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향후 미중 신흥권력 경쟁의 양상이 기존의 근대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전통권력 경쟁의 양상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미중 패권경쟁을 이해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과거 패권경쟁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정치의 지배적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를 설정하고 그들이 벌이는 경쟁의 양상에만 시야를 고정하는 것이 적절할까?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를 굳이 근대적인 의미에서 본 군사력과 경제력 추구의 경쟁, 즉 부국강병 게임의 양상과 그 결과에만 의거하여 예견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21세기 패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19세기의 영국과 독일이나 20세기의 미국과 소련 또는 미국과 일본 등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세력전이’ 형태의 구조변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맞을까?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중경쟁을 전통적인 근대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경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중경쟁이라고 할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경우, 여기서 ‘국(國)’으로 통칭한 행위자의 성격은 무엇일까? 미국과 중국에서 ‘국(國)’은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근대 국민국가와 같은 단일 행위자(unitary actor)일까? 미중경쟁을 ‘두 나라 간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맞는데 이를 두 근대 국민국가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재 관찰되는 ‘두 나라’라는 행위자들은 단일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연방’ (또는 ‘국가연합’) 또는 국가와 기업 및 사회의 복합체로 이해할 수 있는 복합 네트워크 행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국가 행위자에 중심성을 주어 재명명하면 일종의 ‘네트워크 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미중경쟁은 ‘국가 간 경쟁(inter-national competition)’이라기 보다는 네트워크 국가들이 경합을 벌이는 ‘네트워크 간 경쟁(inter-network competition)’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권력게임의 양상은 전통적인 물질적 자원권력의 게임으로 보기에 현재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의 미중경쟁은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권력 게임의 전형적인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 산업과 인터넷 비즈니스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단순한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의 차원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권력 경쟁으로서 표준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들어 구글, 알라딘,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일명 GAF)과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으로 대변되는 중국 인터넷 기업들(일명 BATX) 간의 표준경쟁

또는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업 간 표준경쟁의 이면에 존재하는 소셜 네트워크 행위자들과 양국 정부 행위자들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양국 간에 다차원으로 발생하는 신흥권력 경쟁은 정책과 제도의 보편성을 놓고 벌이는 매력경쟁, 또는 더 나아가 신흥무대의 세계질서를 설계하는 규범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하다(김상배, 근간).

끝으로, 이상에서 개괄한 미중 신흥권력 경쟁의 결과로서 등장할 미래 권력구조 변동의 모습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도 기존 권력전이론의 설명은 미흡하지 않을 수 없다(Organski and Kugler, 1980). 신흥권력의 시각에서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네트워크 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경쟁과 협력의 양상,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하는 미래 세계정치의 구조변동을 무정부 질서(anarchy) 하에서 벌어지는 세력균형의 게임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권력의 소재가 두 나라 중 어느 하나에게로 ‘이동(shift)’ 하는 세력전이의 모습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두 나라가 서로 얽히면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벌이는 복합적인 양상을 잡아내려는 이론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노력의 와중에 그려지는 권력구조의 모습은 단순계의 발상을 전제로 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BoP)의 상(像)이 아니라, 복잡계의 발상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화하는 이른바 ‘세력망(Network of Power, NoP)’의 상일 수는 없을까? 이렇게 벌어지는 ‘네트워크 간 정치(inter-network politics)’ 또는 망제정치(網際政治)의 구조와 동학, 그리고 이러한 밑그림 위에서 두 강대국이 건축하려고 하는 세계질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작업은, 향후 한국 국제정치학이 추구해야 할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V. 맺음말: 종건국 한국의 미래 국가모델

이 글은 동주가 제시한 국가변환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의 미래 세계정치 연구에 남긴 영향 및 그 영향을 받아 펼쳐진 동주 국제정치학의 탈근대적 지평을 살펴보았다. 동주의 지적대로 21세기 국가는 최근 첨단무기의 확산에 따른 물리력 독점의 약화, 다국적 기업의 확산에 따른 권위의 약화, 네이션 단위의 정체성에 대한 안팎의 도전 등을 겪으면서 그 형태와 역할에 있어서 양적·질적 변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환은 유럽연합과 같은 근대국가의 상위에서 부상하는 초국가주의의 움직임과 근대국가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세분화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동주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변환은 미래 세계정치의 새로운 ‘모델 케이스’의 등장을 예견한다는 점에서 한국 국제정치학이 주목해야만 하는 중요한 논제이다. 그러면 새로운 국가모델의 부상 가능성에 직면하여, 19세기 중반 이래 유럽 근대국가 모델의 수용을 모색해 왔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단일민족주의의 강

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동북아 국가들은 어떠한 실천전략을 추진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동주는 동북아의 상황을 “골치 아픈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동주에 의하면, 동북아 지역은 유럽 지역과 같이 초국가주의로 가기에는 너무 민족국가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스위스같이 지역주의로 나갈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쉽지 않다고 자탄한다.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동주는 말하길, “100년 후를 내다보는 경우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지역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초국가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새로운 움직임에 저항적인 단일민족주의가 가장 센 국가들이 동북아에 집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동북아처럼 단일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세 나라가 한 곳에 집결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단일민족주의로 되지 않은 비극을 느껴서 국민국가로서 뒤떨어졌다고 느꼈는데 유럽공동체의 나가는 방향을 보고 100년 후를 내다보는 경우에 우리는 또 뒷바퀴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고 하였다(이용희, 1994, pp.299-300).

사실 동주는 1960-70년대에 제기했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근대적인 단일민족주의의 과제가 던지고 있는 모순적 측면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실천론적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다(이용희, 1977). 한국이 민족주의를 완전히 탈피할 수 없다면 어떠한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동주의 눈에 한국이 추구할 민족주의는 지배층과 기층을 분리시키는 민족주의는 아니었다. 특히나 박정희 식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20세기 초 식민지 시대에 제기되었던 신채호 식의 저항민족주의는 20세기 후반 한국의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결론은 한국이 추구할 미래 민족주의의 길은 ‘전진민족주의’에 있으며, 이는 밖으로는 민족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유연한 정체성을 지향하고, 안으로는 지배층과 기층이 연계되는 ‘열린 민족주의’를 내용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21세기 한국의 맥락에 도입하면, 최근 학계의 주요 논제로 떠오른 중견국의 외교전략과 국가모델의 문제와 연결된다(손열 · 김상배 · 이승주 편, 2016). 이제 한국을 중견국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중견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모델에 대한 재고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개도국 시절 상정하던 단일국가 모델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국가모델을 모색할 경우, 이에 담기는 국가이익의 관념과 민족주의의 정체성 및 구체적인 제도설계의 내용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중견국이라고 불린 나라들이 대부분 국내체제의 정비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시점에서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건 새로운 국가모델에 대한 고민을 풀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동주의 한국민족주의론의 연장선상에서 미래 국가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상이한’ 맥락에서



제기되었지만 ‘동일한’ 성격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두 가지 관념, 즉 동주의 한 국민족주의론과 네트워크 국가의 중견국 외교론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일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전진적 성향을 강조했던 동주의 논의를 21세기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면 어떠한 논의의 지평을 펼칠 수 있을까? 아마도 통합적 국민주의나 저항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복합모델로서 ‘열린 민족주의’가 네트워크 국가로서 미래 한국이 채택할 실천적 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열린 민족주의의 실천적 문제의식은, 이 글에서 사례로 다룬, 사이버 공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추구할 미래전략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참고문헌〉

- 김상배. 2007.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한울.
- 김상배. 근간.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한울엠플러스.
- 손열·김상배·이승주. 편. 2016. 『한국의 중견국 외교: 역사, 이론, 실제』 명인문화사.
- 이용희. 1962/2013. 『일반국제정치학(상)』 복간본. 이조.
- 이용희 저. 노재봉 편. 1977. 『한국민족주의』 서문당.
- 이용희. 1994. 『미래의 세계정치: 국가연합론 강의』 민음사.
- 전재성. 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 2011. 『역사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북학파까지』 을유문화사.
- 하영선. 2013. ‘들어가는 글. “이용희. 1962/2013. 『일반국제정치학(상)』 복간본. 이조, pp.5-17.
-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하영선·김상배. 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하영선·김상배. 편. 2012.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울.
- Akaev, Askar and Vladimir Pantin. 2014.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Future Shift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8(4): 867-872.
- Ansell, Christopher K. 2000.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303-333.
- Ansell, Christopher K. and Steven Weber. 1999.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pp.73-93.
- Carnoy, Martin, and Manuel Castells. 2001.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1-18.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249–281.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3), pp.559–592.
- Jessop, Bob. 2003.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UK: Polity Press.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Maoz, Zeev.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delski, George and William R. Thompson. 1996.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Nexon, Daniel.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rganski, A.F.K. and Jac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nnstich, Joachim K. 2008. *The Making of a Digital World: The Evolution of Technological Change and How It Shaped Our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Thompson, William R. 1990. “Long Wav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lative Decli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pp.201–233.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